

투데이

# “지하철 무임수송비 국가가 부담해야”

## 이낙연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작년 광주 62억...국회 통과여부 주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무임 승객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낙연 민주당통합(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8일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인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 공사들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 역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코레일만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고,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에 의거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

법에 따른 강제 사항인데도 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무임수송 비용은 지하철공사들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실은 3654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6727억 원) 대비 무임수송 비용은 41.8%나 된다.

광주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무임 손실액만 318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

고, 전체 승객의 32%가 무임 승객이어서 민성적자의 원인이 되어왔다.

문제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무임손실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6년 28억9500만원이었던 광주지하철 무임 손실액은 지난해 62억원으로, 2배 이상이 늘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돼 승객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며 “공공목적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인 만큼 국가도 책임을 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의 종’ 이번엔 제대로...

깨진 상태로 납품돼 물의를 일으킨 '민주의 종'이 다시 제작돼 28일 광주 서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도착했다. 공무원들이 종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CCTV 관제센터 입찰 무효”

## 광주지법, KT 승소 판결...市 재입찰키로

광주시의 40억원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8일 주식회사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9월20일 광주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엄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

정할 것을 무효”라며 “다만 KT가 이번 입찰의 1순위임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입찰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최초 입찰공고와는 달리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제공했으며 가격점수 평가 방법도 KT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참여업체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18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분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광주시와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SK텔레콤 컨소시엄의 계약체결은 물론 후속 절차 진행도 중단됐다.

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광주 5개 자치구에 있는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차차 및 쓰레기투기 적발용 CCTV 2000여 대를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 檢, 이상득 전 의원 내달 3일 소환 조사

대검찰청 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은식 부장검사)은 7월 3일 오전 10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의 검찰에 불려오게 됨에 따라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지축은행 금품로비 의혹의 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영업정지된 프라임지축은행이 퇴출 저지를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전 의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의원의 직원 계좌에서 동치돈 7억원을 발견, 그 출처를 추적해왔다.

합수단은 지축은행 금품로비 첩보와 7억원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캐고 있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지축은행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 사무실 계좌에 7억원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확인, 자금 주적을 해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 논란

## 광주시의회·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까지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극대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양국이 내일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경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수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의 신념전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며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의 의결과정 공개 ▲합의사항 폐기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본부

는 이날 광주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까지 내맡기려는 반민족 행위이자, 동북아 군사적 긴장조는 물론 본국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할 반동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일군산정보협정의 의결과정 공개 및 책임자 문책 ▲협정 조인식 중단 및 합의사항 폐기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대화 등을 요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정신대 등 일제 강제 징용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도 야욕 불타는 전범국 일본에 군사대국화 날개 달아주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 청주시·청원군 통합 확정...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동일 생활권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마침내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냈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실시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유효투표자의 79.03%(3만4725표)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만240명 중 4만4190명이 투표해 36.7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4만3937표이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율이 33.3%

를 넘는 상황에서 개표해 유효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투표에 부처진 내용이 확정된다.

이로써 청주시와 청원군은 예정대로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지난 21일 시의회의 만장일치 찬성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끼리 행정구역을 합친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다음달 1일부터 847개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운동장 등 편의 시설물이 일반에 개방된다고 국무총리실이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차량 17만 5000여대의 주차공간과 운동장 247곳, 교육시설 356곳, 체육단련실 207곳, 테니스장, 산책로, 컴퓨터실 등이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정규수업의 학생 가르치면 징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2년 6월 4일자 6면 '정규수업의 학생 가르치면 징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교과지도 말라’ 고교에 공문”(부제목), “시교육청은 방과 후 수업시간에 교과관련 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본문)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은 위 보도와는 달리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및 점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과, “방과 후 수업시간에 교과관련 수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교과지도, 문제풀이 중심 학습 등을 금지하고, 특색 있는 학생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동아리 위주 학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활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지,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생활보험가입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달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의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